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混在

— 그 정치경제적 의미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 영 선 (연세대 교수, 본원 초빙연구위원)

오랜 산고 끝에 UR이 타결되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개방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야 할 한국으로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UR의 타결이 바로 세계적 자유무역주의의 확립과 지역주의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EU, NAFTA가 형성되고 또 APEC이 추진되어지면서 크게 확산되리라 예상되었던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왜 지역주의가 그토록 팽배하게 되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주의 (globalism)라 할 수 있는 UR이 왜 타결되었는지, 또 앞으로 세계 무역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왜 지역주의가 대두되었나?

지역주의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대두되었다. 냉전시대에는 적어도 자유진영에서만은 GATT를 근간으로 한 세계주의가 국제 경제질서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GATT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의해 지탱되는 체제였다. 이 체제는 연속적인 GATT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크게 낮추었으며 특히 케네디 라운드 이후 세계 무역은 황금시대(golden age)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담당한 역할은 자국의 강한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자국의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를 감수하면서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해 왔는가? 미국은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통해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는 대신 정치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지도자적 위치를 공고히 하여 냉전시대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무역질서가 하나의 국제적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공급된 자유무역제도라는 공공재는 그 재화의 공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나라들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소위 무임승차(free riding)가 가능한 것이다.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지불하지 아니한 서독,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신흥공업국들이 이 공공재를 적절히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부담한 셈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이상 민주자유진영의 지도자적 위치가 미국에게 국제정치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감소된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세계의 여타 강대국과 경제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길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에 따른 산업조정이 야기하는 실업의 증대는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정치적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자유무역질서의 공급비용을 더욱 비싸게 만들었고 급기야 미국의 정책이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공공재인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비용은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한 세계주의가 퇴조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 지역주의이다. 인접한 국가 사이에 특혜적 통상 혹은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주의는 적은 수의 국가가 참여하게 되므로 무임승차의 여지가 감소하고 또 공급비용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들끼리 상호 선택적인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조직을 이룰 수 있다.

MIT의 쉐로우교수는 1992년 유럽의 통합이 2차대전이후에 전개되어 온 세계적 통합노력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지역주의적 추세 확대를 예언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로의 움직임은 세계국가들 간의 거시적 협력과 미시적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모두 각 국가의 경제적 주권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비용이며 무역과 시장의 자유화와 경제정책의 협력으로부터 큰 이득이 기대되지 않는 한, 유사한 미시적 생활 양태를 지니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거시적 정책 협력이 쉬운 특정지역내의 협력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새 세계무역질서 : 지역주의와 세계주의의 혼재

그러면 과연 미래의 세계무역질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오늘날 진행되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협상에서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공히 추구되고 있다. 비록 난항을 겪기는 했으나 1993년 말로 협상이 완료된 UR은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EU, NAFTA, 그리고 APEC은 지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주의가 공공연히 주창되면서도 세계주의가 포기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이 무임승차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비용을 감수하여 자유무역체제를 합의해 낸다면 각국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이 단기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또 되도록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 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참여국 전체가 최적의 결과를 얻는 협상결과를 성취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세계경제여건이 계속 변동하고 이에 따라 협상의 내용이 바뀔에 따라 매년 전혀 새로운 시합이 벌어지게 되어 무역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 놓은 협상이 형평성을 지니고 또 그 계약이 잘 이행되었다면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 쉬운 것이나 과거의 GATT의 역사가 그렇지 못했다.

요컨대 순수 전통경제학적 논리만을 따르면 세계주의에 입각한 GATT 중심의 자유무역체도가 가장 효율적이거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산업조정비용에 의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두된 지역주의도 하나의 차선책이기는 하나 결코 경제적 최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오늘날 각국은 UR과 같은 세계주의적 자유무역협상을 계속함과 아울러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결국 미래의 국제경제질서에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한 국가로 볼 때 전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중앙정부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상품과 용역의 교역질서라든지 그 교역상에서 일어나는 분쟁해결 방법,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문제는 세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투자, 경쟁제도, 거시경제적 조율, 또는 인력의 이동 등의 문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번 UR의 타결은 지역주의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R협상을 탈퇴하지 않는 한 여러 지역주의적 기구들은 UR이 표방한 세계주의적 무역질서 즉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주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UR이 다루지 않은 부문에서 지역적으로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정책방향

이러한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혼재, 그리고 그 분업체계가 한국의 정책방향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주의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U와 NAFTA의 폐쇄적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무역전환효과는 한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 한국은 극히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과의 지역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기에 지금껏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PEC이라는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체의 구성을

지지하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UR의 타결로 보다 확대된 세계주의적 무역질서가 지니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다자적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의 과업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APEC의 형성을 포기해서는 아니된다. APEC을 통해 지역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은 얼마든지 발견된다. 해외투자 문제, 기술협력 문제, 노동력이동 문제, 환경 문제, 거시경제적 조정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APEC의 조성은 결코 견고하지 않은 세계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APEC의 존재가 타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적 자유무역체제를 쉽사리 깨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APEC은 세계적 자유무역체제의 대체물로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혼재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즉 다자적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APEC의 조성에 지도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미국과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과 대양주 국가들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한국은 지역 공동의 이득 추구는 물론 이를 통한 자국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약력

- 학 력 : 1970.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6. 12. 미국 Maryland주립대학교 졸업(경제학 박사)
- 경 력 : 1976. 7.-1978. 8. Maryland주립대학교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978. 9.-1981. 3.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1981. 3.-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1993. 6.-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서울 무역센터 우체국 사서함 112)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